

국가 간 150여개 협약 체결...서방 선진국 책임 쟁점

주요 국제환경 협약들

지속 가능한 환경·경제 발전 논의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 이동 통제
 리우협약, 자연·환경·개발 양립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약, 2020년 이후 기후 대응

국제 환경 협약은 환경과 경제발전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가장 활발히 체결되었다.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한다.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런던협약 등이다. 환경관련 주요국제협약들을 살펴본다.

◇바젤협약=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이다.

1976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1987년 6월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에 관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되었다.

이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의 건전한 관리 보장과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 의무화'가 주요내용이다.

◇리우협약-리우환경협약은 자연과 인간, 환경 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가치를 내걸고, 178개국 대표단과 6,000여 개에 달하는 NGO가 모인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선언은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을 재차 확인하는 회의였다.

리우에서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과 그 선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인 '아젠다21'도 채택되었다.

이로써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가 이 선언에 입각해 모든 국가, 주요 사회 분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자원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새롭고도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 환경의 측면이나 지구 개발의 측면에서 완전무결한 체제를 보장하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구는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27가지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 리우환경협약이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약칭 CBD)도 사실상 리우에서 시작되어 1993년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발효시점은 2005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이다.

교토의정서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의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총회장에서 참가 195개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들은 21세기 중반 탄소 제로 실현을 약속했다.

각 국의 공동노력에 대해서는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하에 각 국의 능력,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원 이용에 관한 각 국의 주권, 타국에 대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책임을 확인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크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해의 차이, 각 국의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 생활양식, 문화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상이한 국가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범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파리협약=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그대도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이번 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다만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제법적 구속력은 결국 부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합의이면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 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허세은 학생기자

한국, 10년간 탄소 배출 24.6% ↑ ... 유엔 기후변화 대응지수 '꼴찌'

코리아는 기후 깡패국가

세계 지도자들 기후변화 역설
 OECD 주요국 평균 8.7% 감축
 한국, 주요 이슈에서 제외돼
 호우·태풍·폭염 등 잦은 재해
 봄·가을 사라져 가 기후재난 직면

지구 평균온도는 급격하게 상승중이다. 지난 1만 년간 약 4도 상승했고 산업혁명 이후 100년만에 1도가 상승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당시 세계 국가들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순 제로로 만들어야 210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5%로 대폭 감축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2050년이 되면 화석연료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

이고 향후 10년간 온실가스를 매년 7.6%씩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탄소 중립,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든다는 말은 늘어난 탄소 배출량에서 저감량을 뺀 수치를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든 그 만큼 저감량도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배출전망치에서 37%를 줄이겠다고 의욕적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치를 5억 3600만 톤으로 설정했으나 매년 10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1000만 톤씩 늘

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은 탄소 배출량이 24.6%나 늘어난 반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평균 8.7% 줄였다.

2019년 유엔기후변화총회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61개국 가운데 58위이며, 이 평가 기준에서 한국은 재생 에너지와 기후정책 부문에서는 보통 수준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위, 에너지 소비량은 61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이라리 국제사회가 한국을 '기후깡패국가'(climate villain)로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역설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후'는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정치적 쟁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체감하고 있다. 연재부터인가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국에서 점점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 지난여름의 기록적인 폭우, 북극 방파가 녹아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 모두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석연료를 뿜어 내오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계속 높여서 나타낸 결과다. 이른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다.

기록적인 장마만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대륙을 불태운 호주 산불 등 모두가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재해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농작물 피해 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20년 세계자연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10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형 학생기자

버리면 일회용이지만
 꾸미면 재활용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지 마세요.
 재활용은 우리의 환경을 살립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